3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으로 불균형 해소를"

광주시, 분관 유치 포럼···근·현대 작가 배출 등 위상 보유 ACC-비엔날레 연계 글로벌 시각미술교류 거점 도약 절실

공약으로 '국립 문화시설 유치 및 공공기 관 이전'을 약속한 가운데 역사적으로 풍 부한 문화 · 예술적 기반을 가진 '문화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5대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등 세계적 예술도시인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 했다. 미술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을 유치해 '예향 광주'를 대한민국

광주시는 30일 시립미술관에서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포럼'을 개최했 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새)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지원포럼이 주관한 포럼은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 성, 특화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미술계 인사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유치결의 퍼포먼스를 시작으 로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 포럼 회장의 '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조발제가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 치의 당위성에 대해 광주의 역사·문화·예 술적 기반과 함께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 쟁력을 제시했다.

류 회장은 "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으 광주'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가 로 문화기반 격차에 따른 젊은 세대 외부 유출 등 문화향유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지 역 문화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

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유네스코미 디어아트창의도시인 광주는 아시아를 너 머 세계를 향한 '문화예술의 창' 역할을 수 예술의 도시로 확실히 키워야 한다는 것 행해야 한다"며 "ACC(창제작)-국립현 대미술관 광주관(전시 및 유통)-비엔날 레전시관(마케팅) 삼각거점을 이어 문화 ·예술 가치시슬을 완성하고, 문화·예술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

이어 박광구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 장,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윤 포럼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익 광주시립미술관장, 김허경 광주미디어 아트창의도시플랫폼(G.MAP, 지맵) 센 터장,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유치 필요성과 특화전략을

박 회장은 "광주는 예향의 역사와 전통 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한국 근•현대미술 기조발제에 나선 류 회장은 광주관 유 사의 주요 작가들을 배출했다"며 "세계 5 적 창작활동 활성화를 이끌며 세계 5대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포럼'에 참석. 유치결의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 사진제공=광주시

대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인 광주에 국립현대 미술관을 유치해 진정한 미술도시로 재탄 생해야 한다"고 지역 미술인들의 염원을

조 대표는 광주미술의 위상에 대해 설 명하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권역 별 안배와 더불어 범국가적 차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밀집된 지역의 문화자원을 차별화해 연구 재조명하고 진흥시킨다는 면에서, 지역의 미술문화 전통이 뚜렷하 고 이를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 시키고 있는 지역은 광주가 거의 독보적 이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광주비엔날레는 30년 동안 한국현대미술의 혁신적 변화와 실험

비엔날레로 성장했다"며 "이러한 현장성 과 혁신성, 국제 네트워킹을 한국미술 전 반에 진작시킬 수 있는 국가적 파트너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이 필요하 다"고 역설했다.

윤 관장은 도시 정체성과 연계한 광주 관의 특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 관장은 "광주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 과 공공성에 대한 통찰을 갖춘 도시"라며 "광주관은 전통예향,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디어아트창 의도시 등 광주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미술관으로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광주관과 광주광주비엔날 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립미술관의 시너지를 통한 국제미술도시 실현 비전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광주비엔날레, ACC 등과 국제적인 미술담론을 생산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컬처의 심화형 콘텐 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미술관 성공 사례와 최신 문화시설 트렌드 방향을 통 한 광주과 유치 전략을 언급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광주관은 서남권 최신 미술관인 만큼 미래를 지향해야 한 다"며 "미술관은 그 도시의 철학을 담아 냄과 동시에 예술감상이 맛있는 식사처럼 일상의 일부가 되고, 동선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머무름'과 '휴식'을 함께하며 소풍처럼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NEWS

2025년 7월 1일 화요일

내년 '연휴·공휴일' 118일 우주청, 2026 월력요항 발표

주 5일제 근로자들은 내년 쉬는 날이 올해보다 하루 적은 118일이다.

내년 가장 긴 연휴는 설날과 토・일요일 을 합한 5일이며 공휴일은 올해보다 이틀 늘어난 70일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 이 되는 자료다. 천문법에 따라 우주청이 매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일요일 52일에 국 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20일이 더해져 공휴일이 72일이 되나, 3·1절과 부처님오 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공휴일 수 는 70일이다.

주 5일제 실시 기관의 경우 관공서 공 휴일 70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져 휴일 일수가 122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 휴일 4일을 제외하면 휴일 총일수는 118

주 5일제 기관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

설 연휴(2월 14~18일)가 토•일요일을 합쳐 가장 길고 추석 연휴 (9월 24~27일) 는 일요일을 합쳐서 나흘이다.

사흘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으로 부처님 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 마스 등이 주말과 대체공휴일 등과 이어 져 있다. 연합뉴스

'취임 한달' 李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

"새정부 조기안착 알리고 국정방향 소통"

을 맞아 오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 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취임 한 달 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 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요 정책 등에 대해활발히소 통할 것"이라 고 전했다. 이어 "기자

영 방향 및 주

들과더욱가까 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 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산단 환경조성 3차 공모 국비 84억 확보

여수·나주·함평 선정···근로·문화 등 개선 청년 유입 견인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3차 공모사업'에 여수・나주・함 평 3개 산업단지가 선정돼 국비 8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산단 거리 조성, 노후 공장 리뉴 얼 등 산업단지의 근로·생활·문화환경을 것이다.

여수 오천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국비 4억원)은 상근 인력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개소를 대상으 로 근로・복지시설 개선, 공장 외관 정비, 녹지 환경 조성 등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진행된다.

종합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리'조성사업(국비 20억원)은 산단에 특 화 거리 조성,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교

통 환경 개선으로 추진된다. 산단의 접근 성과 정주 여건 강화가 기대된다.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국비 60억원)은 근로자를 위한 휴식, 문화, 체육 기능이 복합된 공간 조 성으로 청년층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전남도는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2025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9개소 사업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 '아름다운 거 이 선정돼 국비 21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 를 거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정안 신속히 국회 통과해 공약 실현 기대' 주철현, 이 대통령 공약 영농태양광활성화법 발의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 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 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 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 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다른 용도 일시사용 허가 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 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 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 의원의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 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 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 허가를 대체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고, 사업 승인 기간 을 30년까지 허용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차농 보호를 위해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소유자가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농산물 수확량 감 소분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형 영 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 거를 마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 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 를 통과해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햇빛 소득마을이 전국의 농촌 곳곳에 조성되고 특히 전남에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 육성되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최대 10년의 징역형 5,000만원 이하의 벌금







